

#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및 개혁사례

서영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 I. 머리말

국제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주목받고 있다. 고등교육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성장에 핵심 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보장하여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자를 수용하고자 정부와 대학에서는 각종 정책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즉, 고등교육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재원 제 공능력이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공공재원 확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각 나름의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국의 정부와 대학은 고등교육의 재원 확보 및 배분, 학생 지원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개혁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 외에도 고등교육의 사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자율화 요구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절대량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영세규모 대학의 발전기회 제공 등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의 개혁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고등교육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현황 및 개혁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의 과제들과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OECD와 EU 주요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 한국의 특수성에 근거해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의 개혁사례가 주는 시사점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의 개혁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고등교육 재정운용의 도전과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요인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선 국내 요인과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부담 의존에 의한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규모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체 교육비 지출이 GDP 대비 7.5%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는 교육비지출 국가이다. 전체 교육비 중 고등교육기관에 지출되는 비율은 약 2.6%이며 이중 77%는 사부담에, 나머지 23%는 공부담에 의해 지원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의 높은 사부담 의존율을 증명한다(OECD, 2006). 초등교육의 사부담 의존율이 약 20%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고등교육의 사부담 의존율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대학의 경쟁

력 향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부담 의존율의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와 공공재원의 확충 및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둘째, 고등교육에 있어 민간부문(학자금 용자, 장학금 등)에 대한 공공지원의 부족하다. 민간부문(장학금, 가계 지원,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고등교육 서비스 구매력을 높이는 지원책으로서 고등교육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전체 공공재원 중 학생을 위해 지원되는 민간부문 지원은 4.6%에 그치고 있다(OECD, 2006). 이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직접 교부되는 61.9%와 33.5%의 비율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재원의 절대규모 확충과 더불어 공공재원의 분배방식, 증가하는 고등교육의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고등교육 재원의 불안정성이다. 고등교육 재정의 비법정화로 지방교육 재정에 비해 신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율이 좌우되므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총 공공재원 중 고등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준은 2.0%로 OECD 평균인 3.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것도 1999년과 비교했을 때 0.4% 감소한 수준이므로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요인도 재정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고등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투자수익률이 다른 단계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국가의 투자수익률 증대에 대한 압력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Blom, Holm-Nielsen & Verner, 2001 ; UNESCO-OECD, 2002). 한편, 국제적으로 재정 지원의 능력과 무관하게 공공재원의 확충보다 고등교육 수요자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액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약 10여 개 국가들은 1998년 대비 2003년의 공재정 지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요의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감소경향을 보이는 것이다(OECD, 2006 : 206). 이러한 결과는 각국으로 하여금 정부의 재정 지원 한계를 인식하게 해 주며 다양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재정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의 대안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한 고등교육 관련 대출도 활용되고 있는데 주요 대출국 중 한국도 4위에 속해 있어 고등교육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World Bank, 2002).

### Ⅲ.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현황

외국의 재정운용은 OECD 주요국과 EU 주요국의 일반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과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반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우선 OECD 주요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확대해 가고 있다(OECD, 2003). 2003년 OECD가 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축소하고 대학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르웨이의 경우 대학이 교육과정운영의 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University Act 2002』를 통해 대학자율권을 전면 확대할 법적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육기관 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통제의 축소경향을 증명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비 투자율은 1.4%이고 이 가운데 공부담 비율 평균은 1.1%이다. 한국의 공부담 비율 0.6%

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7,089불로 OECD 평균 11,254불의 63% 수준이며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 43%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넷째, 교육기관이 교수와 연구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계약기반 지원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민간재단 등의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제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배분하는 것도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황이다.

EU 주요국도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고등교육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 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면서 다양한 지원유형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학생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원하는 성취관련 대출방식(performance-related loan)을 채택하여 운영하며 동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제도 운영에 있어 기존의 계획경제방식에서 탈피해 시장경제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새로운 재원 확보방식의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고등교육재정 규

모의 절대적 수준 확대, ② 고등교육 재원의 다양화, ③ 고등교육 재원의 효율적 운영, ④ 대학교육·연구의 수월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제공, ⑤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보조금, 대출금) 등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국가마다 지니고 있는 역사적·사회적·법적·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확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 장치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다.

## IV.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개혁사례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세 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① 재원 확보의 전략 마련, ② 기존의 재정분배방식 재조정, ③ 증가하는 고등교육의 수요자를 위한 학생지원 강화방안 모색 등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별로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 1. 재원 확보 개혁사례

재원 확보 개혁사례는 정부재정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재원(funding source)을 마련하는 사례이다. 여기에는 홍콩의 홍콩대학교의 자금 확보전략,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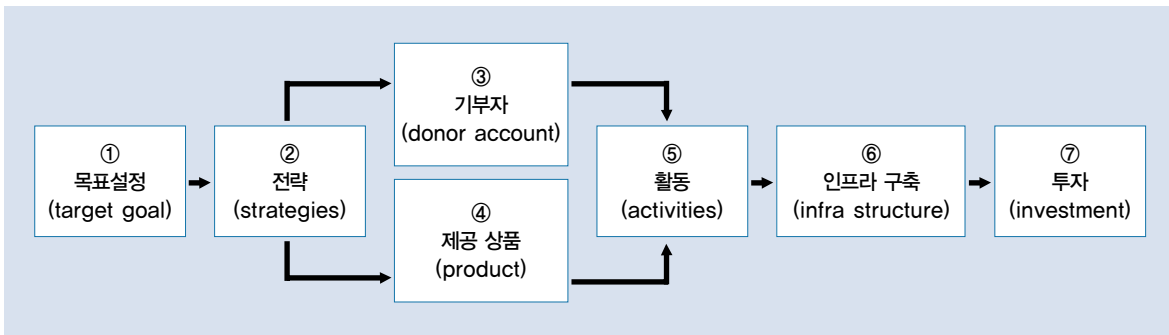


그림 1. 홍콩대학교의 재원 확보전략 기본 틀

의 중간기구(buffer body)를 통한 재원 확보, 일본의 도쿄대학교 법인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첫째,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는 전체 예산의 60% 가량은 정부(the Hong Kong SAR Government)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등록금, 보조금, 각종 투자수익으로 충당한다.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자체재원 확보를 중시하여 1995년 'The HKU Found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Research'를 창설하여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각종 기부금을 받아 2004년부터는 매년 100만 불씩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기금 확보는 [그림 1]과 같은 기본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KEDI-World Bank, 2002).

기금 확보전략에 따르면 4년 간 총 12억 불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에 상응하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확보된 기금은 각종 연구프로젝트, 학생 장학금 등 교수-학습 및 연구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고등교육재정협의회(HEFCE)를 통해 대학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버퍼보디(buffer body)란 고등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펀드를 제공하는 법정권한을 갖는 기구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교육부가 고등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고등교육 시스템의 규모, 새로 설립한 국·공·사립대 학생들을 가이드하기 위한 정책, 등록금 수준, 전체적인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하는 반면, 버퍼보디는 대학들에게 재정(fund) 배분, 재정 수혜대학들의 성과 모니터링, 공공기금에 대한 책무성 확보, 특별정책가이드라인의 실행 등을 담당한다. 영국의 고등교육재정협의회(HEFCE)는 1992년에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 학계·민간·공공 분야에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연간 60억 파운드를 대학에 배분하고 있으며, 2007~2008학년도에 지출된 전체 지원금은 7,137백만 파운드로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된 지원액이다. 전체적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분야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2004년 4월부터 모든 국립대학을 대학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도쿄대학교는 그동안 국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국립대학교에서 탈피해 재정 및 기관 운영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립대학의 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대학교의 재정은 법인회계체제(corporate accounting system)에 의해 운영되며 등록금, 서비스 수익 등도 학교단위 재원으로 관리된다. 기존의 국립대학은 정부 지원재정에서 비목을 초과한 유용은 허가하지 않았으나 법인화 이후 국가는 운영교부금만 정산하고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미집행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일률적으로 책정되었던 수업료도 법인화 이후 표준책정액을 기준으로  $\pm 10\%$  내외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2. 재원 배분 개혁사례

각국의 정부에서는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 배분방식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수식형 재정 지원(formula funding), 미국 콜로라도주의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 칠레의 MECE-SUP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 중심 재정 지원(competitive funding)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레이시아는 17개의 공립대학 운영비의 총 90% 이상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한다. 정부 지원금의 항목은 크게 기관운영비와 발전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2010년까지 공립대학 추가 설립, 17개 공립대학의 학생 수 2배 증가, 이 중 3~4개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위해 100억 RM(한화 3조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방식(MBS: Modified Budgeting System)이 고비용에 관료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재정 지원 수식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수식은 산

출(output), 성과(performance), 발전전략(strategy)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이 재정 지원의 요인에 포함되도록 하여 대학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콜라라도 주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의 장벽이 높아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을 유발하면서도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의 바우처(voucher)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학 재정은 주정부로부터의 지원금과 학생등록금이 대학에 직접 지원되었다. 그러나 바우처 도입 이후 주정부의 재원이 학생(stipend)과 콜로라도 고등교육협의회(fee-for-free)를 통해 지원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대학은 이제 학생을 유치해야만 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주정부의 총 지원금액의 변동 없이 대학의 발전과 실질적인 학생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학 지원비용의 자동 증가도 방지와 향후 고등교육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공공재원 배분의 5%만이 성과 중심 재정 지원(direct public support)으로 이루어지는 칠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MECE-SU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계약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재정 지원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그림 2]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MECE-SUP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400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에 대해

2억2천5백만 불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투입 중심의 재정 지원에서 결과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전환, 공공기금 사용에 대한 책무성 강화, 대학 간 경쟁으로 프로젝트 운영능력 향상, 수행측정을 위한 지표개발로 대학 평가 능력 신장, 교수자원 강화 및 교수-학습 지원 강화, 박사 과정의 활성화, 입학률 및 졸업률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3. 학생 지원 개혁사례

고등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고등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의 참여율 및 소득향상 효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학생 지원(student aid option)방안을 찾고 있다. 학생 지원방안은 대체로 학자금 보조 및 융자방식을 취하는데 국가에 따라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수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미국은 2006~2007학년도부터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s'(미국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을 대상)와 'National SMART Grants'(수학, 과학, 특수외국어를 전공할 대학생을 대상)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성인의 고등학교 졸업률 저조, 대학 신입생의 약 30%가 보충교육 필요, 2010년에는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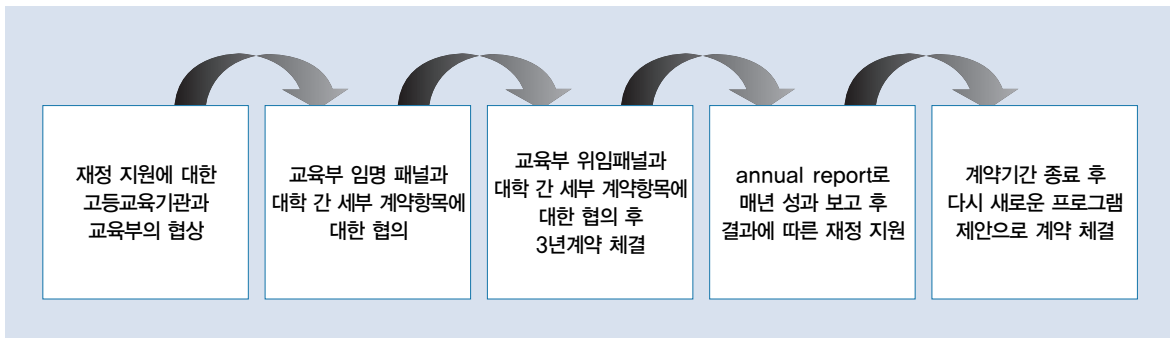


그림 2. MECE-SUP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 지원절차

재보다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 배출 수준이 15% 감소되는 것과 같은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이에 따라 연방교육부는 2006~2007학년도에 7.9억 불의 고등교육분야 연방예산을 지원하며, 향후 5년 간 총 45억 불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학자금제도 공통 지원자격은 미국대학의 풀 타임(Full-time) 학생, 시민권자, 2년제 또는 4년제 정규 학위수여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한다.

둘째, 뉴질랜드는 소득연계 학자금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수입을 조건으로 한 보조로서 상환액은 대출수혜자의 수입과 연계되어 있고 대출상환기간은 개인의 수입과 대출금의 액수에 따라 다양하다. 2003~2004학년도에는 용자신청자격 학생의 약60%인 156,250명이 9억8,700만 불의 용자를 받아 학생당 평균 용자액은 6,316불이며, 용자상환 소요기간은 약 9.3년, 전체 상환자의 75%가 12년 내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자금 용자는 교육부(학생대출제도에 대한 정책 개발), 사회개발부(대출 선불에 대한 책임), 국세청(대출에 대한 상환을 책임)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공·사립대학의 모든 학생으로 학생등록금, 생활비, 과목 관련비용, 행정비용, 학생회 경비 등을 충당한다. 1992년 고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이 방식은 2003년까지 공립대학기관의 등록학생 수 136%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셋째, 호주는 등록금 후불제(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국가와 개인이 고등교육 재정을 분담하는 제도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국가 부담으로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상환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0~8%까지 다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고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양극화 해소, 등록금 인상 갈등 완화, 국가 지원 강화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 V. 시사점

이상에서 제시한 각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의 개혁사례를 통해 재원의 확보, 재원 배분, 학생 지원별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재원 확보 개혁사례와 관련해서는 첫째, 기금조성 통로를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금조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법적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둘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운용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재정운영기구는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보장하며 재원의 적절한 관리뿐 아니라 고등교육 관련기관의 질 제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대학 예산을 법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재원 배분의 개혁사례를 통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수식형 재정 지원을 통해 재정 지원의 효율성 도모해야 한다. 수식형 재정 지원은 최소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성과와 산출요인을 수식에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질 보장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바우처(voucher)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간접지원방식은 정부의 총 지원금의 변동 없이 실질적인 학생교육비를 지원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경쟁을 통한 재정 지원을 하되 성과에 기반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경쟁 중심 평가방식 일지라도 모든 대학에게 참여의 가능성과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열어 주어 대학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학생 지원의 개혁사례와 관련해서는 첫째, 학자금 용자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학자금 용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에 기여하고, 개인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책무성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상환기준을 가계소득으로 결정하는 지원방식은 대출 수혜자의 채무불이행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고등교육의 접근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lom, A., Holm-Nielsen, L. and Verner, D. 2001. Education, Earnings, and Inequality in Brazil 1982-98 : Implications for Education Policy, The World Bank.
- European Commission. 2004. Study on the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in Europe(Vol 1). European Research Associates(EU-RA).
- KEDI-World Bank. 2005. Financing Reform for Tertiary Educa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 OECD. 2003. Education Policy Analysis.
-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 UNESCO-OECD. 2002. Financing Education-Investments and Return : Analysis of the world education indicators 2002 edition. UNESCO-OECD.
- World Bank. 2002. Constructing Knowledge Societies : New Challenges for Tertiary Education.

### 필·자·약·력

#### 서명인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동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 평가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기관 평가 및 정책평가, governance system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체제 분석”, “노무현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 나타난 쟁점 분석”,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간 연계 협력체제 분석 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운용 및 개혁사례』 등이 있다.